

박수근 “노란봉투법, 임금인상·직접고용 의무 확대 아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 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담회
경영계 무분별한 교섭 우려 선 그어
“무조건 노동계 편들지는 않을 것”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경영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 의무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임금인상이나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담회 자리에서 “사용자성이 판단됐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위원회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간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지난 10일 기준 1012개 하청 노조(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위는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사건 294건이 접수된 상태다. 교섭요구를 받고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 신청이 171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117건이다. 노동위는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 중 19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주로 제조업 사내하청, 건설업, 용역계약을 맺은 환경미화·보안 업체 등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다.

박 위원장은 원청 기업들의 교섭 기피 현상에 대해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 문제까지 엮여들어갈까 봐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정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교섭 범위와 관련해 “노조가 여러 의제를 제기하더라도 노동위가 일부만 사용자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져야지, 나머지까지 자동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이를 넘어서 요구까지 포함해서 쟁의행위를 한다면 정당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 지침과 기존 법리에 비춰볼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섭 과정에서 하청 대가 인상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선 가능성만 열었다.

박 위원장은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다음 주 이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청 노조 교섭요구는 많은 반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크게 못 미치는 만큼 교섭 미공고 시정 신청이 늘 것이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된 HMM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전 결정 자체는 경영상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산으로 근로지를 옮긴다고 하면 근로조건 변화로 볼 수 있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행 한 달을 맞은 개정법 운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경영계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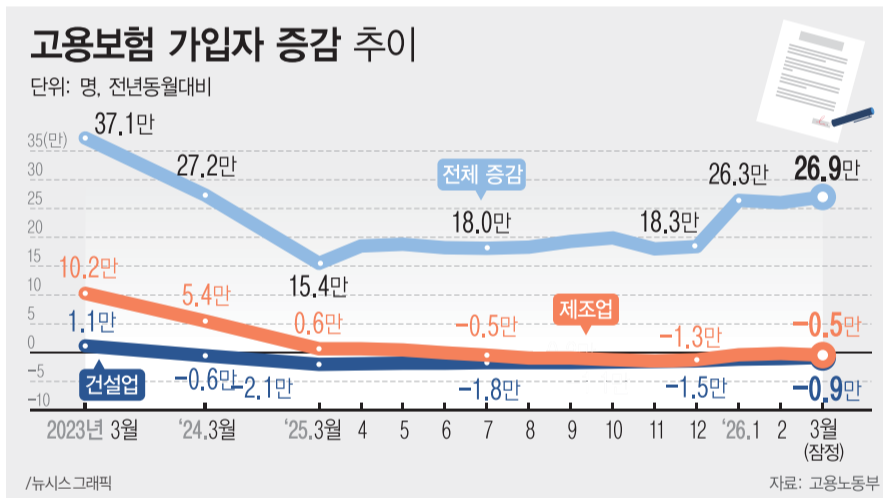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

고용노동부 3월 노동시장 동향
서비스업·고령층 중심 외연 확장
제조업·건설업 침체 장기화 국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6만 명 넘게 늘어나며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의 외연은 확장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는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70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9000명(1.7%) 증가했다. 지난해 내내 10만 명대에 머물던 증가 폭이 올해 들어 3개월째 20만 명 중후반대를 기록하며 지표상으로는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증가세의 일등 공신은 서비스업이다. 보건복지업(12만 명), 숙박·음식점업(5만 1000명) 등을 중심으로 총 28만 명의 가입자가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20만 8000명 급증하며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여전한데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6만 5000명 감소하며 2022년 9월 이후 4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40대 역시 9000명 줄어듦에 고용 동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제조업 가입자는 전년 대비 5000명 줄며 10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 감소는 30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현장의 인력난과 고용 위축을 동시에 드러냈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는 수출 호조로 반등했으나, 자동차

제조업이 감소로 돌아서며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 건설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는 3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감소 규모(9000명)는 전월 대비 소폭 축소되며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기업의 구인 의지를 나타내는 신규구인 인원은 17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인배수도 0.36을 기록하며 전년(0.32)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

생산설비 교체 등 138억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원료를 활용한 종량제봉투의 제작 지원에 나선다. 중동전선 여파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관 생산 정

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13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국내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는 우리 자원 공급망의 든든한 기초”라며 “업계와 협력해 종량제봉투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겠다. 이를 통해 중동전선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AI 기반 배수장 효율 개선

극한호우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극한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배수장 운영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재난 대응 체계다. 인공지능이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현장 담당자에게 적정 가동 시점을 제시하면,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수문 개폐와 펌프 가동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경지 침수와 인명피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배수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해 설비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펌프 고장 위험이 줄어

들어 연이은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올해 59개 배수장에 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전남(보성, 장흥 등 37개소)과 경북(예천, 경산 등 22개소) 지역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시스템의 전국 확대와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 시설물 관리자의 직관과 경험을 뒷받침해 줄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재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권역 단위 재해시설 간 상호 연계 운영으로 지능형 재난 관리 체계를 확고히 다져,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민연금공단, 퇴직자 재취업 돕는다

한국폴리텍대학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과 국민연금공단이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실효성 높은 재취업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폴리텍대학은 13일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설계’ 역량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장년 특화 기술교육’ 노하우를 결합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 재취업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 재취업 설명회 공동 개최 ▲ 임직원 대상

기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폴리텍대학은 앞서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운영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기술교육에서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및 퇴직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력은 막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평생 기술’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라며, “대학이 축적해 온 기술교육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의 중장년이堂堂하게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